

2023년 금속노조 산별교섭 절차 마쳐

10월 24일 중앙교섭 조인식 열어 ... 시급 9,970원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7개 항 합의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23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안에 최종 서명, 날인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10월 24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노조는 앞서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찬반투표 총회를 시행했고, 16일 87%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인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교섭은 경제 위기, 물가폭등, 윤석열 정부 반 노동정책, 열사 정국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금속 노·사는 중앙교섭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문제를 다뤘고, 생명안전에 관한 중대재해 문제를 논의했다”라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상호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교섭이 과연 중심에 있다면 노·사 모두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다중교섭에 관한 문제의식을 전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7월 25일 11차 중앙교섭에서 의견

다.

윤장혁 위원장은 “중앙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사업장도 중앙교섭 합의 사항 정신에 따라서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기대한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금속 노·사가 단체협약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관련 노력에 관한 부분을 담는 합의를 했다”라면서 “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요구에 사용자가 적극 고민한 아주 의미 있는 합의인 듯하다”라고 평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은 “아쉬운 점은 중앙교섭을 일찍 타결했지만 아직 타결 못 한 사업장들이 있다”라며 “금속 산별교섭에서 중앙

접근안을 도출했다.

중앙교섭 통일요구 ▲금속산별협약 21조 2항 신설은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임금체계와 관련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나 특정 직군·직종·부서의 부분근로자대표가 아닌 조합과 합의해 실시한다’로 합의했다.

중앙교섭 요구 가운데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9,970원과 월 통상임금 2,253,22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④ 적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합의했다.

중앙교섭 요구 중 금속산별협약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조 7개 항도 신설했다.

“일본 자본 먹튀, 일본 정부에 해결 책임 있다”

닛토자본 먹튀 일본정부 책임 촉구 기자회견 ... 옹티칼하이테크, 220억 원 투자해 7조 7천억 원 뽑아

금속노동자들이 일본 정부가 한국 옹티칼하이테크 먹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0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닛토 자본 먹튀 사태 일본 정부가 책임져라”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들과 노조 구미지부 조합원, 한국옹티칼하이테크 먹튀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연대 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넘는 동지들이 일본대사관 앞을 가득 메웠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옹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분노와 참담함을 품고 서 있다”라며 “구미 공장을 소유한 일본 닛토덴코 자본이 화재를 핑계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기도 모자라, 손배가압류를 악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금속노조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라면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노동자를 악랄하게 해고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옹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닛토덴코 자본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상황을 똑바로 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집단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은 회사가 노동자대표, 해당 정부와 협력해 집단해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현환 지회장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본이 한국의 손배 가압류라는 악법을 활용해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에 침묵한다면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일본 기업이 저지른 먹튀 행위는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고용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닛토덴코 자본이 겨우 220억 원을 투자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조 7천억 원을 뽑아먹는 동안, 한국에 낸 세금은 410억 원에 불과했다”라면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회사를 포기할 리 없다. 전형적인 위장 폐업을 위한 위법한 해고이자 먹튀 행각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유정 변호사는 “사측은 위법하고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손배 가압류를 걸고, ‘조합원들이 공장을 나가지 않아 공장 철거를 못 해 토지 사용료,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건비 등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나, 철거에 필요한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철거에 필요한 해체 허가, 해체 계획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등 사측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국옹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와 닛토덴코 자본을 한목소리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연대 단체는 ‘일본 정부는 닛토자본 먹튀 사태 책임져라’라고 쓴 손팻말로 비행기를 접어 일본대사관을 향해 날리는 상징 의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쳤다.